

의안번호	제 2010 - 9 호
의 결 연 월 일	2010. 5. 24. (제25차 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 목 차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1
1. 사건 접수 .....	1
2. 처리 현황 .....	6
II.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 중간 보고 .....	11
1. 개요 .....	11
2. 분석 대상 .....	11
3. 분석의 의의 .....	12
4. 분석 내용 .....	12
II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보고 ....	13
1. 개요 .....	13
2. 쟁점별 회신의견 종합 .....	13
IV. 전문위원 업무지원 .....	29
1. 회의지원 .....	29
2. 전문위원 자료실 운영 .....	29
V.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	32
1. 개요 .....	32
2. 수록 내용 .....	32

---

3. 추진 일정 .....	32
<b>VI.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요구 .....</b>	<b>33</b>
1. 개요 .....	33
2. 내용 .....	33
<b>VII.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의 보고 .....</b>	<b>34</b>
1. 개요 .....	34
2.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	34
3. 양형기준 법안의 발의 및 주요 내용 .....	38
<b>VIII. 각급법원 양형실무연구회 연구자료 관련 보고 .....</b>	<b>42</b>
1. 개요 .....	42
2. 연구성과물 목록 .....	42
<b>IX. 기타 .....</b>	<b>48</b>
1. 양형기준 마련 요청 .....	48
2. 내용 .....	48
 별첨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Ⅰ) -공문서, 절도, 약취·유인, 식품·보건범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송유관에서의 유류절도 등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양청」	



---

## I. 양형기준 시행 경과 보고

### 1. 사건 접수

○ 8개 범죄 양형기준이 시행에 들어간 2009. 7. 1. 부터 2010. 3. 31.

까지 법원에 접수된 8개 범죄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단일범 내지 동종경합범 ◆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죄	살인	169	0	0	169
	살인미수	259	0	0	259
	존속살해	16	0	0	16
	존속살해미수	9	0	0	9
뇌물죄	뇌물공여	91	260	8	359
	뇌물수수	65	153	0	218
	부정처사후수뢰	8	5	0	13
	수뢰후부정처사	6	1	0	7
	제3자뇌물교부	6	8	1	15
	제3자뇌물·취득	4	5	0	9
	특가범(뇌물)	48	0	0	48
성범죄	강간	59	1	0	60
	강간살인	1	0	0	1
	강간상해	73	0	0	73
	강간치사	1	0	0	1
	강간치상	185	0	0	185
	강도강간	7	0	0	7
	강제추행	15	185	208	408
	강제추행상해	16	0	0	16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강제추행치상	63	6	0	69
	미성년자의제강간	6	0	0	6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1	0	0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3	19	4	26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35	3	3	241
	성폭법(강간등살인)	3	0	0	3
	성폭법(강간등상해)	65	0	0	65
	성폭법(강간등치상)	74	0	0	74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62	19	1	82
	성폭법(절도강간등)	10	0	0	10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143	0	0	143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24	0	0	24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6	1	0	37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5	1	0	6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0	0	5
	성폭법(특수강간)	156	0	0	156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36	0	0	36
	성폭법(특수강제추행)	11	0	0	11
	성폭법(특수준강간)	50	0	0	50
	아동·청소년성보호(강간등)	35	2	3	40
	준강간	42	0	0	42
	준강간치상	5	0	0	5
	준강제추행	13	55	31	99
	준강제추행치상	2	0	0	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240	4	25	269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강도죄	강도	59	0	0	59
	강도살인	8	0	0	8
	강도상해	334	1	0	335
	강도치사	1	0	0	1
	강도치상	20	0	0	20
	준강도	41	0	0	41
	준특수강도	5	0	0	5
	특가법(강도)	6	1	0	7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	0	0	2
	특수강도	222	6	0	228
횡령배임죄	배임	7	377	65	449
	업무상배임	9	179	43	231
	업무상횡령	27	1,147	358	1,532
	특경가법(배임)	122	5	0	127
	특경가법(횡령)	142	2	0	144
	횡령	19	1,081	478	1,578
위증죄	모해위증	0	9	0	9
	위증	20	881	220	1,121
	위증교사	5	83	4	92
무고죄	무고	11	933	344	1,288
	특가법(무고)	6	0	0	6
총계					10,658



◆ 이중경합범(8개 범죄가 대표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죄	살인	85	0	0	85
	살인미수	110	0	0	110
	존속살해	10	0	0	10
	존속살해미수	2	0	0	2
뇌물죄	뇌물공여	62	43	1	106
	뇌물수수	34	32	0	66
	부정처사후수뢰	9	2	0	11
	수뢰후부정처사	11	1	0	12
	제3자뇌물교부	4	4	0	8
	제3자뇌물취득	1	4	0	5
	특가범(뇌물)	33	1	0	34
성범죄	강간	81	0	0	81
	강간살인	1	0	0	1
	강간상해	57	0	0	57
	강간치상	72	0	0	72
	강도강간	17	0	0	17
	강제추행	18	106	88	212
	강제추행상해	6	0	0	6
	강제추행치상	29	1	0	30
	미성년자의제강간	3	0	0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1	0	2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5	0	0	85
	성폭법(강간등살인)	3	0	0	3
	성폭법(강간등상해)	46	1	0	47
	성폭법(강간등치상)	50	0	0	50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1	0	0	11
	성폭법(절도강간등)	11	0	0	11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89	0	0	89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34	0	0	34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6	1	0	27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0	0	1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6	0	0	6
	성폭법(특수강간)	114	0	0	114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124	0	0	124
	성폭법(특수강제추행)	15	0	0	15
	성폭법(특수준강간)	28	0	0	28
	아동·청소년성보호(강간등)	15	0	0	15
	준강간	15	0	0	15
	준강간치상	1	0	0	1
	준강제추행	2	17	1	20
	준강제추행치상	2	0	0	2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93	1	3	97
강도죄	강도	82	6	0	88
	강도살인	26	0	0	26
	강도상해	300	4	0	304
	강도치사	3	0	0	3
	강도치상	23	0	0	23
	준강도	27	0	0	27
	준특수강도	3	0	0	3
	특가법(강도)	3	0	0	3

범죄군	세부죄명	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8	0	0	8
	특강법(특수강도)	2	0	0	2
	특수강도	244	4	0	248
횡령·배임죄	배임	6	66	3	75
	업무상배임	22	130	11	163
	업무상횡령	47	464	65	576
	특경가법(배임)	85	4	0	89
	특경가법(횡령)	139	3	0	142
	횡령	18	381	72	471
위증죄	모해위증	0	6	0	6
	위증	7	67	3	77
	위증교사	0	5	0	5
무고죄	무고	7	198	44	249
	특가법(무고)	5	0	0	5
총계					4,318

-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 정식재판청구사건, 미수범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

## 2. 처리 현황

- 2009. 7.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8개 범죄 사건(단일범, 경합범)으로서 2010. 3. 31.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범죄군별 처리건수

		사건구분			전체
		고합	고단	고정	
살인죄	수	400	0	0	400
	비율	100.0%	0.0%	0.0%	100.0%
뇌물죄	수	110	235	3	348
	비율	31.6%	67.5%	0.9%	100.0%
성범죄	수	1,477	157	102	1,736
	비율	85.1%	9.0%	5.9%	100.0%
강도죄	수	828	1	0	829
	비율	99.9%	0.1%	0.0%	100.0%
횡령·배임죄	수	202	1,680	436	2,318
	비율	8.7%	72.5%	18.8%	100.0%
위증죄	수	10	502	78	590
	비율	1.7%	85.1%	13.2%	100.0%
무고죄	수	12	454	146	612
	비율	2.0%	74.2%	23.9%	100.0%
전체	수	3,039	3,029	765	6,833
	비율	44.5%	44.3%	11.2%	100.0%

☞ 세부죄명별 처리건수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살인죄	살인	146
	살인미수	230
	존속살해	17
	존속살해미수	7
	전체	400
뇌물죄	뇌물공여	219
	뇌물수수	83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부정처사후수뢰	5
	수뢰후부정처사	4
	제3자뇌물교부	5
	제3자뇌물취득	5
	특가법(뇌물)	27
	전체	348
성범죄	강간	61
	강간살인	2
	강간상해	73
	강간치상	173
	강도강간	11
	강제추행	217
	강제추행상해	15
	강제추행치상	54
	미성년자의제강간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5
	성폭력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4
	성폭력범죄(강간등치상)	1
	성폭력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
	성폭력범죄(주거침입강간등)	2
	성폭력범죄(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
	성폭력범죄(특수강간)	2
	성폭력범죄(특수강도강간등)	3
	성폭력범죄(특수준강간)	3
	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92
	성폭법(강간등살인)	4
	성폭법(강간등상해)	58
	성폭법(강간등치상)	71
	성폭법(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43
	성폭법(절도강간등)	16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157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36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5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4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5
	성폭법(특수강간)	134
	성폭법(특수강간등)	2
	성폭법(특수강도강간등)	95
	성폭법(특수강제추행)	14
	성폭법(특수준강간)	19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간등)	2
	준강간	18
	준강간치상	4
	준강제추행	46
	준강제추행치상	1
	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강간등)	136
	특수강제추행	1
	전체	1,736
강도죄	강도	90
	강도살인	17
	강도상해	350
	강도치사	1
	강도치상	28
	준강도	59
	준특수강도	9
	특가법(강도)	7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4
	특강법(특수강도)	1
	특수강도	263
	전체	829
횡령배임죄	배임	203

범죄군	세부죄명	전체
	업무상배임	122
	업무상횡령	981
	특경가법(배임)	46
	특경가법(횡령)	88
	횡령	878
	전체	2,318
위증죄	모해위증	3
	위증	488
	위증교사	99
	전체	590
무고죄	무고	609
	특가법(무고)	3
	전체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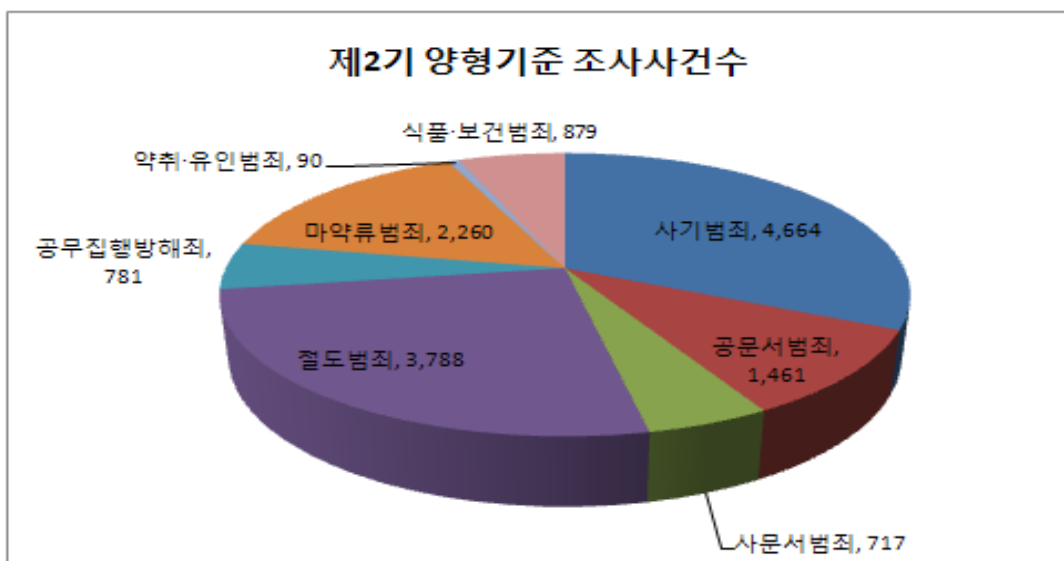
## II.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 중간 보고

### 1. 개요

- 위원회 제20차 회의(2009. 9. 21.)에서 제2기 위원회가 기준 설정할 대상범죄가 의결됨에 따라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에 본격 착수
  - 대상범죄군 : 사기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절도범죄, 식품·보건범죄(중한 유형), 약취·유인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마약범죄
- 2004. 3. 1.부터 2008. 12. 31.까지 판결 선고된 사건들 중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는 14,640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 작업
- 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중 4개 범죄에 대한 분석결과를 먼저 보고함(공문서, 절도, 식품·보건, 약취·유인)

### 2. 분석 대상

- 2007. 11. 19. ~ 2008. 3. 28.까지 조사된 8,875건 및 2010. 2. 22. ~ 2010. 4. 29.까지 조사된 5,765건
- 범죄별 조사사건 비율





### 3. 분석의 의의

- 기존의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및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통해 대상범죄의 양형기준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양형자료를 제공
- 이를 통해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고, 원활한 양형기준안 연구 진행에 기여

### 4. 분석 내용

- 별첨 「제2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Ⅰ) -공문서, 절도, 약취·유인, 식품·보건범죄-」과 같음

### Ⅲ.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보고

#### 1. 개요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규칙 제11조에 따라 법원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조회 내역
  - 대상 기준안
    - 양형위원회 제23차 회의(2010. 2. 8.)에서 수정 의결된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
  - 조회 기간 : 2010. 3. 2. ~ 2010. 4. 2.
  - 회신 기관
    - 16개 기관 : 대상기관(38개) 중 15개 기관 및 비대상기관 중 1개 기관
    - 대상기관 : 국회, 대검찰청, 대법원,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부, 보건복지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여성가족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교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개인의견 회신),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 비대상기관 : 한국여성의전화
  - 회신자료
    - 별첨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 2. 쟁점별 회신의견 종합

##### 가. 주취 상태의 감경요소 반영 제한

- 국회, 대한법무사회 : 의견 없음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 찬성
- 대법원
  -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 및 기타의견도 참작
  - 반대의견
    - ▶ 사안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예외적으로 감경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할 필요 있음
  - 기타의견
    - ▶ 선언적 규정에 불과함
    -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에 대한 정의를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의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주취상태였다는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또는 고려하지 않는다)’로 규정함이 타당
- 대검찰청
  - 주의적 규정에 불과
  - 심신미약 인정 여부 불문 일반 가중요소로 규정함이 타당
- 대한변호사협회
  - 반대
  - 현행 양형기준으로도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주취상태는 감경인자로 작용하지 않고, 다른 양형인자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중·감경인자로 작용하도록 되어 있음. 오히려 이를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직된 양형기준이 되어 구체적 타당성을 잃을 수 있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찬성
  - 다만, 지속적 모니터링 및 매뉴얼 마련 등 추가조치 필요
- 법무부

- 선언적 규정에 불과
- ‘범행을 의도하거나 예견하고 자발적으로 음주 또는 마약 투여에 이른 경우’를 특별 또는 일반가중요소로 규정함이 타당

○ 보건복지부

-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상태였다는 사정을 감경요소에서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나, 주취상태의 범죄 방지를 위해 ‘가중요소’로 추가함이 타당

○ 여성가족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을 감경요소에서 삭제하고,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규정함이 타당
-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 반영 필요

○ 한국교정학회

- 당연규정에 불과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형법제10조제3항)의 적용시 일반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임

○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개인의견 회신)

- 이상철 검사(학회 상임이사)
  - ▶ 주의규정에 불과
  - ▶ ‘범행을 의도하거나 예견하고 자발적으로 음주나 마약을 투여한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규정함이 타당
- 최호진 교수(학회 총무간사)
  - ▶ 찬성
  - ▶ 다만, ‘주취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특별인자에 의해 정해진 형량범위를 조종하는 일반적 가중인자로 고려할 수 있음

○ 한국여성단체연합

- 찬성
- 다만, 심신미약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감경요소로 인정되지 않도록

명시 바람

○ 한국여성의 전화

- 피해자의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에 상관없이 주취상태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함이 타당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의 양형인자 정의란에 ‘다만,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는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함이 타당

나.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추가

○ 국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 의견 없음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찬성

○ 대검찰청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와 별개의 인자로 규정함이 타당
- 전체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함이 타당

○ 대법원

-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기타의견도 참작할 것
  - ▶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에도 적용함이 타당
  - ▶ ‘결박 기타의 수단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에 ‘장기간의 감금’을 추가함이 필요
  - ▶ ‘그 밖의 도구’에 ‘위험한 물건’을 포함함이 타당
  - ▶ ‘아동인 피해자에게 건강상 해로운 알코올, 약물 등을 섭취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이 타당
  - ▶ 아동인 피해자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외설 비디오 등을 보여주거나 부녀간에 성관계는 정상적이라고 교육하는 행위 등) 추가함이 타당
  - ▶ ‘마약·약물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를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에 포함함이 타당

-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기준이 무엇인지 문제되고, 폭행, 협박 수단의 한 형태로 중복 평가 우려 있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찬성
- 다만,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는 중복 우려 있으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만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의제강제추행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분명히 할 것
- 13세 이상 성범죄에도 적용

○ 법무부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와 선택적이 아닌 별개 인자로 규정
- 전체 성범죄의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함이 타당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찬성
- 다만, 13세 이상 성범죄에도 적용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찬성
- 다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의 유형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 있음

○ 한국교정학회

- 찬성
- 다만, ‘결박 기타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는 ‘체포, 감금’이 경합범으로 성립하므로 삭제함이 타당
- ‘소아기호증’을 가중요소로 존치함이 타당

○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개인의견 회신)

- 이상철 검사(학회 상임이사) : 찬성

- 최호진 교수(학회 총무간사) : 없음

○ 한국성폭력상담소

- ‘가학, 변태’의 용어는 병적인 증상을 지칭하므로 폭력성을 반영하는 용어로 재정의함이 타당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를 각각 별도의 가중요소로 규정함이 타당
- 전형적인 피해자상, 성폭력 통념을 강화하는 ‘성적 수치심’ 용어 수정함이 타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와 별도의 가중요소로 둘 것
- 병적인 증상을 지칭하는 ‘가학적·변태적’ 용어를 폭력성을 반영하는 용어로 재규정 바람

○ 한국여성의전화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를 ‘가학적 침해행위’로 명명함이 타당
- 위 요소 중 ‘성기 속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를 ‘성기나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로 수정함이 타당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의 추가**

○ 국회, 대한법무사회 : 의견 없음

○ 대검찰청

- 요건의 엄격성으로 실효성 의문, 목적달성 위해 요건 완화 필요
- ‘같은 기회에 다수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우 포함할 것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또는 동일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으로 수정
- ‘다수 피해자’의 정의를 ‘피해자 13세 미만인 경우 2인 이상, 그 외 피해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규정
- 전체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함이 타당

○ 대법원

-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도 참작할 것
-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저질러 위 각 범행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위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한 이후에 다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어 결국 동일한 범행 습벽이 가중요소로 이중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에 대하여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음. “3인 이상”으로 보다 넓게 보아서 더 엄한 처벌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5인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없애고 ‘다수의 피해자’로 하든지, ‘복수의 피해자’ 또는 ‘5인 이상 다수 피해자이거나 성범죄의 성향·습벽의 발현으로 보이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위 양형인자를 “각기 다른 시기에 13세 미만의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5인 이상 다수 피해자 발생 여부를 ① 아직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죄에 한하여 그 피해자의 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문맥상 후자의 의미로 보이는바, 이 경우 “행위” 관련 양형인자가 아니라 “행위자/기타” 관련 양형인자로 보이고, 후자의 의미로 보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함
- 13세 미만의 피해자 1인의 경우라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할 필요 있음

#### ○ 대한변호사협회

- 반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며 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삭제한다는 수정안은 경합범 가중규정 대상이거나 상습범 가중규정 대상이므로 이를 단일 범죄의 특별가중양형인자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함. 이는 소아기호증



을 삭제하겠다는 개정안의 태도와도 논리적으로 모순됨

-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13세 미만의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실체법상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안에 의한 양형 이외에 형법 총칙상의 경합범 가중에 의하여 무기 또는 2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함. 현재의 양형기준안은 종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범죄 전반에 관하여 경합범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우에 대처하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만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계속적, 반복적 성폭력범죄가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여 1개의 상습 성폭력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상습범의 경우 형법총칙상으로는 각칙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이 5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상습성을 인정하여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상습범 가중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도 분명하지 않고, 만일 그러한 의미라면 상습범의 요건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양형기준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음.
- 개정안과 같은 계속적, 반복적 범행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삼겠다고 하면서 종래 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는 치료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형인자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것 역시 논리적으로 모순됨.
- 계속적·반복적 범행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고, 13세 이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다만, 종래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였던 소아기호증을 삭제하는 것은 소아기호증에 기하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책임이 그러한 증세가 없이 자유

로운 의지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책임에 비하여 가벼워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찬성
- 다만, ‘다수 피해자’를 5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것이 아닌지 우려됨
- 13세 이상 성범죄에도 적용

○ 법무부

-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
- ‘1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포함함이 타당
- ‘같은 기회에 다수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우도 포함함이 타당
- 전체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함이 타당

○ 보건복지부

- 찬성
- 다만, 다수 피해자, 동일인 대상 재범, 동일인 대상 반복범행이 각각 별도의 가중요소로 적용되어야 하며, 13세 이상 성범죄에도 적용함이 타당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소아기호증’ 삭제 반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추가 찬성

○ 여성가족부

- 찬성
- 다만,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13세 미만이 포함된 2인 이상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규정함이 타당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다수 피해자’의 정의를 ‘13세 미만의 2인 이상’으로 규정함이 타당
- 한국교정학회
  - 찬성
  - 다만,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적(1회 이상의 전과)이 있으면 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개인의견 회신)
  - 이상철 검사(학회 상임이사)
    - ▶ 찬성. 다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또는 동일 피해자 대상 반복적 범행’으로 규정함이 타당
  - 최호진 교수(학회 총무간사)
    - ▶ 피해자 수와 관련하여 ‘3인 이상’이 적절한 피해자 수로 보임
- 한국성폭력상담소
  - 찬성
  - 다만, 다수의 개념이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수 조정 필요함
  -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적 범행을 한 경우를 별도의 양형인자로 규정함이 타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찬성
  - 다만, ① ‘5인 이상’을 하향 조정이 필요, ② 시기와 상관없이 2회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
- 한국여성의전화
  -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2인 이상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규정함이 타당
  -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2회 이상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가중인자로 규정함이 타당

## 라.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의 추가

○ 국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 의견 없음

○ 대검찰청, 법무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찬성

○ 대법원

-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도 참작할 것

-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범행 자체가 가중요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른 장소보다 열거된 유형의 장소에서의 범행을 특별히 가중처벌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장소의 범위가 불명확함.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등하교길, 학교 주변, 학교 내 등이 예시되어 있으나 13세 미만의 학생이 움직이는 동선을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이 포함되어 사실상 특별양형인자의 의미가 무색해 짐.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위 장소에 포함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특별보호장소의 일반적인 정의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고 위 장소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해 주어야 함
- ▶ ‘특별보호장소’의 정의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학교 주변이나 등하교길과 같은 경우에 어느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거리 등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이나 승강기에 대해서도 그 범위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함
- ▶ 이미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높은 법정형을 설정할 당시에 본질적으로 평가된 부분을 다시 가중적 요소로 반영하게 되어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가중적 양형인자의 선정은 형사정책적 고려만을 반영해서는 안되고, 행위책임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범행장소의 특수성만을 들어 곧바로 행위불법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 특별보호장소는 범죄에 대한 평가 중 결과반가치에 차이가 없고 행위반가치에 있어 영향이 적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특별보호장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특별장소에서의 아동보호는 지역안전망 및 치안강화로 해결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
  - 찬성
  - 다만, 특별보호장소의 의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제1항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 관련 기관,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등)함이 타당
- 여성가족부
  - 찬성
  - 다만, ‘학교 내(교정, 교사 포함)’을 ‘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내(교정, 교사 포함)’로 규정함이 타당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반대
  - 특별보호장소에서 보호의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중요소로, 보호의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 양형 유형에서의 형량 결정의 참고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 한국교정학회
  - 찬성
  - 다만, 공동주택의 계단, 승강기 등은 부적합
-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개인의견 회신)
  - 이상철 검사(학회 상임이사) : 찬성
  - 최호진 교수(학회 총무간사) : ‘놀이터 및 공원시설, 학원가’ 포함함이 타당

○ 한국성폭력상담소

- 찬성
- 다만, 이 인자를 실제 양형인자 고려시 다른 경우의 범죄를 감경요소로 인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함이 타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찬성
- 다만, 실효성 증대를 위해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공부방, 학원차량 등 특별보호장소를 포괄적으로 명시해야 함

○ 한국여성의 전화

- 특별보호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성범죄 발생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 성범죄 유발 책임이나 비난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 있음
-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공부방, 학원 차량 등도 특별보호장소로 특정함이 타당

마. 기타 의견

○ 국회

- 일반 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의 문언상 ‘피해자’에게 야기한 것인지,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대검찰청

- ‘영구장애가 발생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야기시킨 상해’의 경우를 ‘중한 상해’와 함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 조정
  - ▶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법정형 보다 낮음

- ▶ 특별가중·감경인자 수가 2개 이상 차이가 나 형량범위 조정될 경우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이 동시에 가중·감경되는 것이 타당
- 형량범위 내 출발점 설정 필요
- ‘소아기호증’에 이르지 않은 ‘소아상대 상습적 범행’을 특별가중요소로 고려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필요

#### ○ 법무부

-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 조정 필요
  - ▶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형량범위 법정형 보다 낮음
  - ▶ 특별가중·감경인자 수가 2개 이상 차이가 나 형량범위 조정될 경우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이 동시에 가중·감경되는 것이 타당
- 형량범위 내 출발점 설정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함이 타당
- ‘소아기호증’ 존치함이 타당
-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특별가중인자나 집행유예 주요부정요소로 규정
- 집행유예 기준의 명확화 필요함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필요

#### ○ 보건복지부

- 감경요소의 최소화
  - ▶ 심신미약(본인책임있음)은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고,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가중요소로 추가함이 타당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함이 타당
  - ▶ ‘추행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소극가담’, ‘경미한 상해’를 감경요소에서 제외함이 타당
  - ▶ ‘합의’를 미성년대상 또는 친족대상 성범죄에서는 제외함이 타당

- 가중요소의 보완
  - ▶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에 있어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의 경우 하나의 가중요소로 처리됨에 불과하므로, ‘장애인’ 이면서 ‘청소년(13세-18세)’인 경우를 각각의 특별가중요소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분리·추가함이 타당
  - ▶ 친족성폭력의 기본형량 ‘상향조정(제2유형으로 이동)’ 하거나 또는 ‘특별가중인자’로 분류·관리함이 타당
-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의 추가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형법제303조, 성폭법제11조)’은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제1유형에 추가함이 타당
- 양형기준의 기본구간의 최저형량은 법정 최저형량을 기준으로 반영할 것
  - ▶ (13세미만 강간) 성폭력법의 13세 미만 강간의 법정 형량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양형 기본구간은 법정 최저형량을 반영하여 7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중구간은 상한선을 폐지하여 7년 이상으로 수정
  - ▶ (강간치상) 성폭력법의 13세미만 강간치상의 형량은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양형 기본구간은 법정 최저형량을 반영하여 7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중구간은 7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수정
  - ▶ (강간살인·치사) 성폭력법의 강간 등 살인·치사의 형량은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므로 양형 기본구간은 법정 최저형량을 반영하여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중구간은 상한선을 폐지하여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수정
  - ▶ (친족강간) 성폭력법의 친족대상 강간의 형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형량이 비슷한 제2유형에 포섭하고, 양형 기본구간은 법정 최저형량을 반영하여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중구간은 상한선을 폐지



○ 여성가족부

- 양형기준의 기본형량을 법정형량을 기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 개정법률 반영 필요
  - ▶ 13세 미만 대상 범죄에 대한 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의견	의견	의견
1	강제추행 /의제강간	1년~3년 → 3년~5년	2년~4년 → 4년~6년	3년~6년 → 5년~7년
2	강제유사 성교	3년~5년 → 5년~7년	4년~6년 → 6년~8년	5년~8년 → 7년~9년
3	강간	4년~6년 → 8년~10년	5년~7년 → 9년~11년	6년~9년 → 10년~12년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필요

○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개인의견 회신)

- 이상철 검사(학회 상임이사) :
  - ▶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함이 타당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은 기본형량범위가 법정형 하  
한보다 더 낮은 영역을 권고하고 있음
  - ▶ 특별감경인자인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함이 타당
- 최호진 교수(학회 총무간사)
  - ▶ 아동 성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향 조정함이 타당

○ 한국여성의 전화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필요

## IV. 전문위원 업무지원

### 1. 회의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 통계분석과)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회의의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회의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24차	2010. 5. 7.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 대상범죄(식품·보건, 공문서, 절도, 약취·유인)의 양형기준초안 검토</li> <li>○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li> </ul>
1팀 회의	제28차	2010. 4. 9. 19:00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문서, 식품·보건)의 양형기준안 작성방안
	제29차	2010. 4. 15. 08:30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문서, 식품·보건)의 양형기준안 작성방안
	제30차	2010. 5. 4. 1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공문서, 식품·보건)의 양형기준초안 검토</li> <li>○ 법률 개정에 따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li> </ul>
2팀 회의	제20차	2010. 4. 23. 18:30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절도, 약취·유인)의 양형기준안 작성방안
	제21차	2010. 5. 7. 16:45	○ 제3차 공청회 대상범죄(절도, 약취·유인)의 양형기준안 검토

### 2. 전문위원 자료실 운영

#### 가. 추진 배경

- 양형 통계자료의 제공 필요 : 전문위원들에게 전문위원 과제 관련 연구활동을 위한 양형 관련 통계자료 및 분석결과의 제공 필요
-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 필요 : 양형 통계자료에는 법원,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경우에 따라서는 생년월일),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가족 관계, 전과(전과의 내용) 등 다양한 개인정보[개인을 특정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가 포함되어 있음. 단, 각 통계마다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상이

○ 관련 법령의 규정

-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을 위해 통계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함(2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식별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3항).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통계법 시행령 제48조(통계자료의 보호) : 개인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기타 사항에 대해 제한 가능,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사용 후 폐기 등의 조치 요청가능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함(제10조 제2항).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제10조 제3항)

○ 연구를 위한 양형 통계자료의 제공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의 범위·제공방식의 제한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제안 방식]

- ① 운영지원단 관리 사무실 내에서 양형 통계자료를 제공, 이용을 희망하는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열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단, 양형 원데이터의 출력, 복제는 불가함. ⇒ 가칭 **전문위원 자료실** 조성
- ② 전문위원들이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의 산출을 희망할 경우, 운영지원단 소속 통계전담직원이 운영지원단 보유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청 통계분석결과를 제공. 단,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제외

#### 나. 전문위원 자료실 운용 개요

- 운영지원단 관리 사무실 중 하나를 ‘전문위원 자료실’로 조성.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동 자료실에서 양형 통계자료를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열람을 위한 컴퓨터 및 각종 기구의 비치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열람에 제공
- 전문위원이 원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분석결과의 산출을 희망할 경우, 운영지원단 소속 담당직원이 분석 작업을 수행, 분석결과를 제공(단, 개인정보는 제외)
  - 전문위원 요청시 통계분석 담당직원이 당해 전문위원을 직접 지원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 데이터 자체의 출력, 복사, 전송은 금함
  - 통계자료를 열람, 이용하는 컴퓨터에 출력 및 복사, 전송 방지장치 설치
  - 단, 인터넷이 연결된 별도의 컴퓨터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배려
- 전문위원 전원(현 11인)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방안 마련
  - 이용신청을 미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위원들이 고루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 V. 연간보고서 발간 경과 보고

### 1. 개요

- 2010. 3. 22. 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2009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 건’(의안번호 제2010-7호)이 의결됨에 따라 연간보고서 발간을 추진 중임

### 2. 수록 내용

- 2009. 4. 27.부터 2010. 4. 26.까지의 양형위원회 활동 및 2010년도 활동계획

### 3. 추진 일정

- 보고서 초안 작성 : 2010. 5. 중순
- 견본 제작 : 2009. 5. 하순
- 위원 회람 : 2009. 5. 하순(전자파일 형태로 송부 예정)
- 교정 작업 : 2009. 6. 초순
- 인쇄 의뢰 : 2009. 6. 초순
- 국회 보고 및 배부 : 2009. 6. 초순 ~ 6. 중순

## 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요구

### 1. 개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으로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요구서가 접수됨

### 2. 내용

- 법제사법위원회(이한성 의원)
  - ▶ 질의사항 : “묵비권 행사시 반성을 이유로 한 감경을 금지하는 등 양형기준상 고려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의견
  - ▶ 답변 : 의원님이 제시하신 방안을 양형위원회에 보고하여 새로운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 Ⅶ.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의 보고

### 1. 개요

- 제1기 양형기준의 토대가 되는 법정형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 법률이 2010. 4. 15. 공포됨

### 2.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 가. 이미 시행 중인 법률

##### (1) 형법 각칙(시행일 : 2010. 4. 15.)

- 상습으로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신설)

구법	개정 법률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일 : 2010. 4. 15.)

##### (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제5조)

- 강간 : 5년 이상 → 7년 이상
- 강제추행 : 3년 이상 → 5년 이상
- 처벌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확대

##### (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제7조)

- 강간 : 7년 이상 → 10년 이상
- 유사성교 : 5년 이상 → 7년 이상

- 강제추행 : 3년 이상 → 5년 이상

#### (다) 강간등상해·치상(제8조)

- 주거침입등강간(제3조 제1항), 특수강간등(제4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제7조) : 무기, 7년 이상 → 무기, 10년 이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제6조) : 무기, 5년 이상 → 무기, 7년 이상

#### (라)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제19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 행위 불처벌), 제2항(심신미약자 행위 감경) 및 제11조(농아자 행위 감경)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법	개정 법률
<b>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b>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b>5년</b>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b>3년</b>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b>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b>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b>7년</b>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b>5년</b>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u>인척(2촌 이내)</u> 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b>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b>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	<b>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b>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



<p>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u>7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u>5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p> <p>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p> <p>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u>3년</u>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u>10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u>7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p> <p>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p> <p>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u>5년</u>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
<p><b>제9조(강간등 상해·치상)</b></p> <p>①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u>7년</u>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u>5년</u>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b>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b></p> <p>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u>10년</u>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5조, 제6조 또는 제14조(제5조 또는 제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u>7년</u>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b>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b></p> <p>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일 : 2010. 3. 19. 또는 2010. 4. 15.)

- 아동·청소년의 개념을 기존의 청소년과 같이 '19세 미만자'로 정의(제2조. 시행일 : 2010. 3. 19.)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제7조. 시행일 : 2010. 3. 19.)
- 음주 또는 약물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법 제3조 내지 제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 2. 시행일 : 2010. 4. 15.)

구법	개정 법률
	<b>제2조 (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b>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b>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b>3년</b>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b>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b>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향후 시행 예정 법률 : 형법 총칙(시행일 : 2010. 10. 16.)

-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25년에서 50년까지로 각각 조정(제42조)
- 사형에 대한 감경을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제55조 제1항 제1호)
- 무기징역·무기금고에 대한 감경을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상향 조정(제55조 제1항 제2호)
- 무기징역의 가석방요건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함(제72조)

현행법	개정 법률
<b>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b>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u>15년 이하</u> 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u>25년까지</u> 로 한다.	<b>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b>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u>30년 이하</u> 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u>50년까지</u> 로 한다.
<b>제55조(법률상의 감경)</b>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u>10년 이상</u> 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u>7년 이상</u> 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b>제55조(법률상의 감경)</b>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u>20년 이상 50년 이하</u> 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u>10년 이상 50년 이하</u> 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b>제72조(가석방의 요건)</b>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u>10년</u> ,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b>제72조 (가석방의 요건)</b>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u>20년</u> ,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3. 양형기준법안의 발의 및 주요 내용

#### 가. 개요

-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이 2010. 3. 30. 양형기준법안을 대표 발의함

- 양형기준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양형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② 양형위원의 자격과 임명방법을 강화하며, ③ 양형기준에 지속적 효력을 부여하고, ④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법을 제정한다는 것임

#### 나. 현행 법원조직법과 양형기준법안의 주요 내용 비교

	현행 법원조직법	양형기준법안
설치(소속)	대법원 소속의 독립 위원회(제81조의2)	대통령 소속의 독립 위원회(제3조)
위원의 임명 (위촉)절차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제81조의3)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또는 위촉(제5조)
위원의 수, 구성 및 상 근여부	①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  ②위원의 구성(제81조의3) -법관 4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①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13 인의 위원으로 구성. 모든 위원들은 최초 양형기준 발효시까지 상근. 그 이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상근(제5조)  ②위원의 구성(제5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4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경력 15년 이상 의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경력 15 년 이상의 변호사 2인 -공인된 학술단체에서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 범죄심리학 또는 사회학 등 범죄와 관련된 분야의 교수 1인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 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1인 -기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위원장의 임 명 또는 선 출 절차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 중 호선(제5조)
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제81조의3)	2년.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다만, 업무

		의 연속성을 위하여 최초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음(제6조)
위원장의 직무	국회에 대한 출석, 보고 및 답변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b>국회에 대한 출석, 보고 및 답변의무</b> (제9조)
의사 및 회의록 공개 여부	명시적 규정 없음 * 운영규정은 회의공개원칙 및 비공개 사유 규정(제10조)	<b>의사공개 원칙</b> .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로 비공개(제12조)
회의의 개최	명시적 규정 없음 * 운영규정은 정기회, 임시회 개최 시기 및 횟수 규정(제2조)	정기회의 <b>매월 1회 이상</b> 개최. 임시회, 소위원회 개최 규정(제11조)
회의록	명시적 규정 없음 * 운영규정은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제출의무 규정(제8조)	회의록 작성 및 필수적 기재사항 명시. <b>회의록 공개의무</b> (제13조)
양형 기준의 방식	양형기준의 원칙 및 고려사항 규정(제81조의6)	범죄의 중대성 등급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급을 양측으로 한 <b>양형기준표</b> 형태로 양형기준 제정. 형량범위의 폭은 <b>하한의 25% 또는 6개월 중 장기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b> (제15조)
사무기구	사무기구 설치조항 있음(제81조의9) * 양형위원회규칙에 운영지원단에 관한 규정 있음	<b>사무처장</b> 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b>대통령</b> 이 임명. 임기 2년. 연임 가능(제29조)
최초 양형기준의 설정 (제정) 범위	명시적 규정 없음 * 부칙에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최초의 양형기준 설정 의무 명시	최초 양형기준 제정안은 <b>2년 이내에 국회에 제출</b> 되어야 하고, <b>형법 규정 범죄</b> 및 형법에 관한 <b>특별법</b> 에 규정된 범죄,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야 함(제16조)
양형 기준의 제·개정 절차	위원회가 설정 또는 변경(제81조의6)	위원장의 <b>국회의 출석·보고의무</b> . 양형기준안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b>국회에 제출</b> , 공개해야 함. 국회는 양형기준안의 <b>수정·재검토 요구권</b> 및 <b>심의 확정권</b> 가짐(제18조)
양형 기준의 효력 및 양형이유의 기재 여부	법적 구속력 없음. 법원이 양형기준 <b>벗어난 판결</b> 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b>양형이유</b> 기재(제81조의7)	법관의 <b>양형기준 준수 의무</b> . 판결서에 <b>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b> 를 설시해야 하고, 양형기준 <b>벗어난 판결</b> 하는 경우에 구체적 <b>이탈사유</b> 를 기재해야 함(제21조)

법관의 판결 서 부분 송 부 의무	명시적 규정 없음	법관은 판결서 부분 등 양형위원회에게 송부할 의무 있음(제23조)
보고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추진 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 발간하고, 국회 에 보고(제81조의10)	위원회는 매년 2월말까지 활동내역, 예산 결산내역, 양형기준 시행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연구·분석내용 포함된 <b>연간보고서</b> 를 <b>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b> 에 제출하여야 함 (제24조)
부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 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가능(제1 항)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최초의 양형기 준 설정 의무 부과(제2항)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 되, 위원 및 직원 임명, 규칙 제정, 설립 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가능(제1조) -법원조직법 제8편(양형위원회) 삭제(제2 조) -종전 위원회의 행위 및 위 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 의 행위 또는 양형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간주, 종전 양형기준은 이 법에 따른 양 형기준 시행 전까지 효력 유지, 종전 위 원회의 일체의 자료는 위원회의 설립·준 비를 위해 이관(제3조)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 기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날부터 시 작(제4조)

## VIII. 각급법원 양형실무연구회 연구자료 관련 보고

### 1. 개요

- 양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각급법원 양형실무연구회의 활동 성과 등을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변경 및 양형정책 연구심의 활동이나 전문위원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급법원 양형실무연구회의 회의자료 등 연구성과물을 수집함
-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법(지원 포함) 양형실무연구회로부터 연구성과물 회신 의뢰

### 2. 연구성과물 목록

- 현재까지 수집된 각급법원 양형실무연구회의 연구성과물은 다음과 같으며, 계속 수집중임
- 향후 작성될 연구성과물은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임

(2010. 5. 14. 기준)

법 원	회의일	발표주제 및 자료 등	비 고
서울고법	2008. 9. 1.	서울고등법원 관내 형사합의부 양형실무토론 자료집	
	2009.12.21.	”	
	2010. 4.12.	”	
대전고법	2007. 7. 2.	판결 전 조사 개요	대전보호관찰소 팀장 홍정원
	2008. 7. 7.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본 형사양형의 분석	
		살인 및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양형	
	2009.12.28.	성폭력 범죄양형 발표	
대구고법	2009. 5.25.	1. 양형기준제 하에서 양형심리 개선방안 2. 살인죄의 양형인자와 양형분석	
	2009.11.30.	양형기준 시행과 형사재판실무	
부산고법	2009. 5.25.	1. 형사항소심의 양형	

법 원	회의일	발표주제 및 자료 등	비 고
		2. 양형기준안의 적용과 관련하여 3. 횡령, 배임죄의 양형기준에 관하여	
	2010. 5.31.	1. 공판중심주의 활성화 방안 등 2.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에 대한 양형 적정화 및 양형기준 적용실태 등 3. 성범죄에 대한 양형 적정화 방안 등 4. 위증, 무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정화 방안 및 양형기준 적용 실태 등	자료 추후송부
광주고법	2010. 1.25.	1. 양형기준 시행과 형사재판 실무 2. 양형실무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3. 전주부 양형기준 의견조회 결과 4. 순천지원 양형기준 적용실무	
서울중앙지법	2009. 3.20. ~ 2009. 3.21.	양형이유 기재방식 및 양형심리절차	
		1. 양형기준 적용결과 분석 2. 양형기준 적용결과 분석 3. 법원조사관의 배치에 관한 검토	
	2009.11.23.	1. 성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의 검토 2.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심리방안 3.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제전담 단독재판부 양형자료	
		4. 양형이유 기재 방식의 검토 5. 양형기준과 새로운 양형제도 시행에 관한 소고	
	2009.11.30.	1. 부적절한 양형이유의 기재 및 숨겨진 양형이유에 대한 고찰 2. 양형이유 선례들	
	2010. 3.19. ~ 2010. 3.20.	1. 양형기준의 적용현황과 과제 2. 양형조사의 법적근거와 실무운영 3. 2009년 성과분석 및 2010년 운영계획	
서울동부지법	2007.12. 7.	1.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양형 2. 조두순 판결 이후 법원의 변화	
	2008.11.24.	2008년도 상반기 대법원 형사판결례 검토	
	2009. 7.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양형에 대하여	



법 원		회의일	발표주제 및 자료 등	비 고
서울남부지법		2009. 2. 2.	향후 시행될 양형기준 적용시 경합범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9. 6.26.	양형자료의 충분한 수집 및 공방을 유도하기 위한 양형심리의 방식	
		2009.11.24.	양형기준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서울북부지법				2010. 5.17. 개최 예정
서울서부지법		2007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요소 및 양형 사례분석 2. 형사합의사건의 양형요소 분석 및 양형 의 기준	
		2008	형사 단독사건의 설문조사를 통한 양형 비교	
의정부지법		2008. 8.25.	주요범죄 양형분석 (살인죄, 강도죄, 성범죄를 중심으로)	
인천지법		2010. 4.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수원 지법	본원	2008. 7. 7.	1. 양형통계분석 2. 양형토론자료	
		2009. 6. 1.	양형사례 설문분석 (양형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2009.11.16.	1. 음주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의 조사방법과 판단 2. 성범죄 사건의 양형에 관하여	
	성남 지원		1. 양형기준의 기본 구조와 적용 방법 2. 양형심리절차 개선 및 양형이유 기재 방안에 대한 의견 3.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 4. 양형편차 해소 내지 양형기준 정립을 위한 모색	
	안산 지원	2009.11.16.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양형	
	안양 지원	2010. 5.24.		개최예정
춘천지법		2009. 9. 4.	1.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라본 제1심 재판 2. 서울고등법원 관내 지방법원 항소부의	

법원		회의일	발표주제 및 자료 등	비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 에 대한 양형기준		
		2009. 9.24.	양형기준 및 그에 따른 양형이유의 기재		
		2009.12.18	양형기준 설정의 쟁점과 양형심리개선 및 양형이유기재 방안		
대전지법	본원	2009. 6.29.	1. 대전지방법원 사행성 게임 범죄의 양형 기준 2. 양형심리 충실화를 위한 양형자료 수집방법 및 활용 3. 사례를 기초로 한 양형토론자료		
	천안지원	2009. 4. 7.	살인, 뇌물,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토론		
		2009. 6. 2.	강도, 횡령, 배임 양형기준안에 관한 토론		
		2009.11.24.	위증, 무고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토론		
청주지법		2009. 6.	음주·무면허운전과 관련된 교통범죄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양형 인자의 분석		
대구지법		200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죄의 양형	
				2. 선불금 사기와 관련한 양형	
				3. 마약류 범죄의 양형에 대하여	
		2005	상반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의 양형분석	
				2.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비교	
				3. 까드깁 사건의 양형기준	
		하반기	1. 사회봉사명령의 부과기준(적정시간)에 관하여		
			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양형에 관하여		
		2006	상반기	1. 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하여 2. 사기죄의 양형분석 3. 마약류사건의 양형분석	
하반기	1. 사회봉사명령의 부과기준에 대한 분석 2. 성인오락실·성인피시방 사건의 양형분석 3. 증인의 진술번복, 수사기관의 조사와 이에 따른 재증언의 문제				

법 원		회의일	발표주제 및 자료 등	비 고
			4. 위증죄의 양형에 관하여	
		2007 상반기	1. 사기죄의 유형별 양형분석 2. 사기죄의 양형 분석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서 피해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2007 하반기	1. 교통범죄의 양형 2. 위증죄의 처리현황과 분석 3.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처분현황과 집행상의 문제점	
		2008 상반기	1. 불구속재판의 확대와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적정한 양형 2. 무고죄의 처리현황과 분석 3.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분석	
		2008 하반기	1.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양형 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부과기준 3. 사행성 게임장 및 유사석유 사건의 양형	
		2009 상반기	1. 양형기준의 개요 2.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	
		2009 하반기	1. 양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집행유예의 요건 및 효과 2. 방문판매·유사수신범죄의 양형분석	
		2010 상반기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의 실태 분석	
부산 지법	본원	2009. 4.27.	항소심에서 본 직권파기례 및 유의사항	
		2009. 6.22.	1. 양형기준의 구체적 적용 2. 양형기준제에 관한 일반론	
		2009. 9.28.	1. 위증·무고죄 양형토론 및 양형기준의 적용 2.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사건처리방향 및 형벌법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2009.12.15.	1.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한 양형기준제 적용의 문제점 2. 횡령·배임의 집행유예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 3. 위증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소고	

법원		회의일	발표주제 및 자료 등	비고
		2010. 4.12.	형사단독재판에 관한 유의사항 (항소심에서의 직권파기사례를 중심으로)	
	동부 지원	2009. 5.20.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토의	
		2009. 7.16.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양형토의	
		2009. 9.14.	불법게임장영업에 의한 게임산업법 위반죄 등의 양형토의	
		2009.11. 9.	소년범죄 고찰 - 소년보호관찰을 중심으로	
울산지법		20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양형관련 토론	
		2009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의 양형관련 토론	
		2010(1/4)	영장처리기준에 관한 연구 토론	
		2010(2/4)	항소심에서 본 직권파기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한 발표·토론	
광주지법		2009. 5.18.	사행행위 등 관련 범죄 양형기준안	
		2009. 7.20.	양형기준제의 시행과 판결서의 작성 (양형이유 기재방식)	
		2009.10.19.	양형과 양형기준	
전주 지법	본원	2009.10.12	양형기준의 적용원리와 주요내용	
	정읍 지원	2009. 4. 6.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제주지법		2009	1. 음주운전에 대한 소고 2.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양형기준 마련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양형요소	

## IX. 기타

### 1. 양형기준 마련 요청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대한석유공사로부터 송유관에서의 도유행위(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 접수

### 2. 내용

- 별첨 「송유관에서의 유류절도 등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양청」과 같음